
뉴질랜드 호주 연수 보고서

2019. 9.



<차 례>

I. 연수개요	3
1. 연수목적	3
2. 연수개요	3
3. 기대효과	3
4. 세부일정 및 주요연수내용	5
II. 국외연수 참석자 명단	7
1. 참석자 명단	7
2. 연수단 팀 구성 및 임무	8
III. 방문국가(기관) 주요현황 및 연수내용	9
1. 호주	9
2. 뉴질랜드	25
3. 뉴질랜드 호주의 탐방을 통한 제주에서의 시사점.....	41

1. 연수개요

1. 연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섬 국가의 정책 관리 제도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선진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주의 환경, 경제산업구조 등 유사한 오세아니아 지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징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기획

2. 연수개요

- 2019. 8. 10(토) ~ 8. 17(토) 《6박 8일》
- 방 문 지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Black Town City)
뉴질랜드 (Auckland)
- 연 수 단 : 총 21명
 - 도 의 원(6)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6)
 - 사 무 처(4) : 전문위원실 직원(4)
 - 집 행 부(11) : 행정시 직원(11)

3. 기대효과

- 자연환경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등 제주와 유사한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 뉴질랜드)의 중장기 정책체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동기부여 계기
 - 서비스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정책 추진 중이었음

- 의회중심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유대적인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각각의 관할 영역을 분리하여 선택과 집중의 행정시스템 마련되어 있었음
 -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통로가 다양화함
-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와 의회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함
- 주민과 소통하는 호주·뉴질랜드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업무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상원과 하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견제와 협력의 장점을 확대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음
 - 양원제 특유의 분권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법안 발의와 심사평가간에서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층적인 법안의 필요성·효과 등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의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
-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구정책과 사회적 탄력성 정책, 인사·조직운영 제도 사례파악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된 공직사회, 주민이 체감하는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4. 세부일정 및 주요 연수내용

일 자	지 역	교 통	주요 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1일차 (8.10.토)	제주 김포 인천	대한항공 KE1222 KE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0 제주 출발 ■ 16:50인천→오클랜드(11시간25분소요) (기내숙박)
2일차 (8.11.일)	뉴질랜드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15 오클랜드 공항 도착 ■ 문화체험 ※ 공휴일 관계로 기관방문섭외 불가
3일차 (8.12.화)	뉴질랜드 (로토루아)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그로돔 농장 견학/양털깎기 쇼 관람
4일차 (8.13.화)	뉴질랜드	전용차량	<p>【공식방문: 오클랜드 시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정부의 행복정책 (예산-복지 혜택 등) ■ 주민의 행복중심의 개방형 의사결정시스템
	뉴질랜드	전용차량	<p>【공식방문: 멜리사 리 국회의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국민당 국회의원 간담회 - 한국인 최초 뉴질랜드 4선 의원
5일차 (8.14.수)	호주	전용차량	<p>【공식방문: 블랙타운 시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주-지방정부간 자치 및 재정분권 노력 및 성과 ■ 다양한 지방정부형태 및 주요특징 파악

<p>6일차 (8.15.목)</p>	<p>호주</p>	<p>전용차량</p>	<p>【공식방문: 솔헤븐 시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차원의 과세체계 및 투자이민 정책 ■ 지방의회 전문성 및 위상강화를 위한 위원회 제도
<p>7일차 (8.16.금)</p>	<p>호주</p>	<p>전용차량</p>	<p>【공식방문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제도 (숙의민주주의 사례) ■ 각종 법정계획과 연동되는 인구정책
<p>8일차 (8.17.토)</p>	<p>시드니 인천 김포 제주</p>	<p>KE122 KE12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45 시드니→인천공항 ■ 21:00 인천→제주공항

II. 국외연수 참석자 명단

1.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 고
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균	
	〃	부위원장	강철남	
	〃	위원	김황국	
	〃	위원	정민구	
	〃	위원	좌남수	
	〃	위원	현길호	
회 (10명)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상영	
	〃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	행정6급	강미란	
	〃	행정7급	김용미	
집	기획조정실	실장	김현민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장	송은미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장	김길범	
	감사위원회	민원조사팀장	고관선	
	특별자치법무과	행정6급	현길환	
행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김세룡	
		애월읍장	강재섭	
부 (11명)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총무팀장	부진근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책임연구원	홍창유	

2. 연수단 팀 구성 및 임무

	팀장	팀원	주요 임무
1팀	강성균	김황국, 김현민, 송은미, 김세룡, 현길환, 김동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섬 국가 정책관리제도 및 자치분권 주요 사례 수집·분석
2팀	강철남	정민구, 김상영, 김길범, 강미란, 현창훈, 강재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형태 및 지방의회 분야 정책 수집·분석 • 인구정책분야 수집·분석
3팀	좌남수	현길호, 김인성, 고관선, 부진근, 홍창유, 김용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제도 수집·분석 • 투자이민자과세제도 수집·분석

III. 방문국가(기관) 주요현황 및 연수내용

■ 호주

□ 주요현황

- 호주는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768만km² (한반도의 약 35배)로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임
- 위도상으로는 국토의 39%가 열대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인구분포 중심지대인 동남부는 온대해양성 기후하에 있어 쾌적한 기후환경을 보임
-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혼합형), 연방정부와 주정부 (6개주 및 2개 자치지구) 이며, 의회는 양원제(상원 76석, 하원 150석 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헌법과 주 헌법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헌법이 법률적 우위를 가짐
- 행정은 3계층으로 연방, 주(States, 6개) 및 준주(Territory, 2개) 정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560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정부는 6개의 주와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에 설치되어 있음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주와 유사함(GDP 비중, 2018 기준)
 - 서비스업(76.5%), 건설(7.9%), 제조업(6.3%), 광업(6.3%), 농림수산(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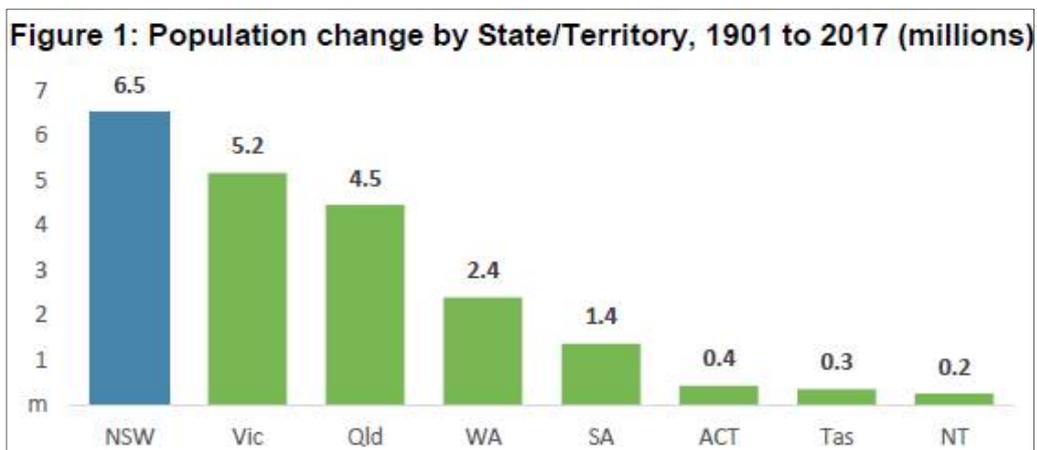
1. 방문지역 및 기관

(1) 뉴사우스웨일즈 지역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 블랙타운 시의회)

- 뉴사우스웨일즈주(State of New South Wales)는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 있는 주로 주도는 시드니. 동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빅토리아주, 서쪽으로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북쪽으로는 퀸즐랜드주와 접함
-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추정인구는 802만명(2018년기준) 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인구의 62.9%가 시드니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

① 선정이유

- 호주의 초창기 정착지역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인구 (802만 명, 18년 기준)가 가장 많은 주임
 -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는 가장 오래된 의회(1822년 설립)
- : 전체 호주 560개가 넘는 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152개 포함 (City, Municipal or Shire Council 등)



(자료: NSW Parliamentary(2019.2), e-brief, p2.)

② 내용

- 방문일시 : 2019년 8월 16일
- 장소 : NSW 주의회의사당
- 주요내용 : 호주 주정부와 의회 체제, 정치사회적 시스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방경제 및 재정 자립도, demographic 현황 등



• 블랙타운 시의회

① 선정이유

- 뉴사우스웨일주의 중심도시(면적 약 247km², 인구 약 34만명)로 블랙타운의 시의원은 15명이며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이 중복하여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음. 임기는 4년
- 전자산업과 에너지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젊은 실직자들 및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2. 자료수집 방법

- (1) 기존 문헌 등으로 파악한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사전에 방문예정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함
- (2) 요청한 자료를 출국 전 회신 또는 현지 방문 시 제공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3. 자료수집내역

- (1) 연방-주-지방정부간 자치 및 재정분권 노력 및 성과
 - 호주는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와 호주지방정부연합(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LGA)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상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있음

- 호주의 사례를 통해 제주와 국가가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방안 모색

(2)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및 배경과 주요 특징 파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정부제출 이후 행정시 권역조정, 준 자치형태 등 후속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호주의 경우, 지방정부의 형태가 7가지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각 유형이 채택된 배경과 주요 특징 등을 파악하여 제주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6개 주와 2개 준주의 지방정부 유형 현황>

지방정부의 형태	NSW	Vic	Qld	WA	SA	Tas	NT	합계
Boroughs		1						
Cities	26	33	7	22	21	6	2	121
Councils	28					23		51
District councils					35			35
Municipalities	6							6
Regional councils	8		29	11	4			52
Rural cities		6			1			7
계	68	40	36	33	61	29	2	272

(자료: 윤성현(2018),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p43, 재구성.)

(3) 지방정부(의회) 통폐합, 의원정원 조정 등 현황 파악

- 호주의 지방정부 수가 2001년 615개에서 2017년 561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지방정부 신설폐지 근거, 추진배경, 지역주민을 포함한 의사결정 등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특별법」 근거를 활용한 기관구성 다양화 또는 효율적·효과적 정부운영 방향에 대해 참고하고자 함

(4) 지방정부 차원의 과세체계 및 투자이민정책 현황

- 호주는 최근 중국자본 투자 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로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투자이민정책 변화 등 구체적인 정책내용 및 외국인 부동산 투제 규제 세제정책을 파악하여 제주의 세정정책과 투자이민정책 개선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사전에 파악한 현황〉

- 해외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자국민들의 주택 소유 기회 박탈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해외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인상
- 외국인 토지세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조절

(5) 시민 참여형 정책결정 제도 현황(숙의민주주의 사례)

- 호주 지방정부 시민의견 청취제도(have your say) 등 시민의 행정참여제도와 활용도, 시민만족도 등을 파악함
- 의미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제주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6) 지방의회 전문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제도 (상원·하원 통합적 운영) 현황

- 연방·주·지방정부 각 차원의 의회 운영 및 위원회 지원, 의회비 규모 및 예산과목, 개별 의원 지원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7) (각종 법정계획과 연동되는) 인구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상하수도, 광역도시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에서 밝힌 인구계획이 제각각인 상황임
- 제주의 모든 법정계획의 인구계획을 큰 오차 없이 연동하여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큰 과제임
- 시드니의 경우, 중장기계획(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마련하여,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슈들을 지속가능한 사회통합과 도시재생 관점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호주의 연방,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계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시사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8) 지방자치제도

- 특성 : 호주의 지방자치단체(주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함)는 호주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각 주정부에서 각각의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지자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자치단체가 헌법상 인정되지 않은 당연한 결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대단히 미약함
- 지방정부와 관련한 각종 결정시 주정부 단위의 각종 독립적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보조금위원

회(Grant Commission), 지방의원 및 직원들의 보수를 확정하는 보수확정위원회(Remuneration Tribunal),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폐치 및 분할을 결정하는 경계조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 등이 있음

-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기초 지자체 모두의 이해가 관계되는 정책결정을 위한 호주정부협의회(COAG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가 있음

(9) 지방자치단체별 업무담당

○ 연방정부

- 국가업무담당. 그 책임 영역은 호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방 및 외교 업무를 포함

- 사회 복지 및 연금 및 주로 기금을 통한 건강, 교육, 환경 문제, 노사 관계 업무를 맡고 있음

○ 주정부

- 호주 헌법에 따라 주정부는 연방 정부 책임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게 됨

- 주요 주의 책임에는 학교, 병원, 보존 및 환경, 도로, 철도 및 대중교통, 공공사업, 농업 및 어업, 노사 관계, 지역 사회 서비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소비자 업무, 경찰, 교도소 및 응급 서비스가 포함

- 각 주마다 자체 헌법이 있어 정부 시스템을 설정함

○ 지방정부

- 지방 정부는 지역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명칭)다름

- 규모가 큰 지역 순으로 도시(Cities) 또는 시의회(Councils), 도시나 자치

단체(Municipalities) 및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큰 도시 중 하나에 기반을 둔 샤이어(Shires) 협의회로 존재

- 담당업무로는 주로 건축 규정 및 개발, 공중 보건, 지방 도로 및 보도, 도서관, 지역 환경 문제, 폐기물 처리 및 많은 지역 사회 서비스가 있음

담당업무 참고 (<https://www.parliament.nsw.gov.au>)

Things you might do in a day...	...and which level of government gets involved.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Shower and get ready for school</i>		• Power, gas, water, sewerage from State corporations	
<i>Have breakfast</i>	• Currency • Trade, imports & exports • Advertising	• Consumer laws • Shop and workplace laws	• Health inspections of shops
<i>Catch the bus</i>	• National road funding	• Buses, bus passes • Traffic laws, Police • Traffic lights, Road signs • Major roads, road taxes	• Local roads • Street signs • Bus stops
<i>Go to school</i>	• Funding to States • Higher education	• Education Department • School funding and subjects	• Local kindergartens and pre-schools
<i>Go to the library</i>	• National Library	• State Library • School libraries • Subsidies to councils	• Local libraries
<i>Play sport</i>	•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 National sports bodies	• State sports centre • Funding to local councils • Safety, health and education	• Local sports fields and playgrounds
<i>Phone a friend</i>	• Telephone services		
<i>Watch TV</i>	• Broadcasting laws • ABC TV and Radio		
<i>Go to the doctor</i>	• Medicare • Funding to States • Drug control	• Hospitals • Ambulance services	• Community services, e.g. meals on wheels
<i>Go home</i>		• Planning laws	• Local building controls • Trees and footpaths
<i>Put out the garbage</i>	•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 Waste disposal • Pollution controls	• Garbage collection • Local environment

https://en.wikipedia.org/wiki/Local_government_in_Australia

<호주는 지역의 규모 및 인구 밀도, 인구 비율을 사용하여 지방 정부를 분류>

local government area type		설명
Boroughs	자치구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명칭 현재 빅토리아 주에서 사용 - Borough of Queenscliffe in Victoria
Cities / Rural cities	도시 / 농촌도시	호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도심으로 분류, 도시로 지정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경우 township으로 이해
Councils / Regional councils	협의회 / 지역협의회	지방정부의 한 형태인 자치구 의회, 관할구역담당
District councils	지구 협의회	주로 호주남부에 형성 多 주정부 협회에서 정의한대로 지역 별로 그룹화 되어 있음 ex) District Council of Elliston , District Council of Cleve
Municipalities	지자체	
Shires	샤이어	호주의 일부 시골지역에서 지방정부지역을 샤이어로 명칭

○ 시사점

- 보조금, 지자체 폐지 및 분할 등 호주의 주요정책 결정은 연방정부가 아닌 기초지자체에 근접한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짐
- 지보조금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주 단위별로 인구 규모에 의해 총괄적인 액수만 결정하면, 주단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함. 시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필요
- 정책결정을 독립적인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함으로써 결정의 신중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임

(10) 호주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Governmental Amalgamation)

○ 지방자치단체 병합

- 1 세기 이상 동안 호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외딴 지역의 행정단위들의 합병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옴
- 2000년데 이후 동안 남호주,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뉴사우스 웨일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퀸즐랜드는 모두 광범위한 지방 자치 구조조정 중
- 전형적으로 의회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는 호주 지방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지역 거버넌스에서 '보다 더 큰 것이 더 낫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보여줌 (Dollery and Crase 2004)
- 지방정부청은 2003-04년 (DOTARS 2005년 66) 지방정부 보고서에서 '연방에서 1991년까지 80년 동안 호주 지방 의회의 수가 20% 이상 감소했다' 와 '1991년 이후 13년 동안 의회 수가 27 퍼센트 더 감소했다' 고 밝힘
- 1910년부터 현재까지 호주 전역의 절대 지방 의회 수의 감소되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구조 개혁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상태 --> 211개 지방의회를 78개 지방자치단체로 탈바꿈

○ 일반적인 호주 지방정부의 통폐합 구조개혁

- 호주에서 행정구역간 합병은 거의 항상 선호되는 정부정책이자, 국가 정부의 행정 개혁의 도구
- 전형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작은 지방 당국을 단일 단체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며, 종종 소위 '도넛'의 형태로 더 큰 지역 중심을 둘러싼 작은 행정단위를 묶는 것임
- 지역 의회의 합병은 거의 자발적이지 않고, 항상 철저한 강제에서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주 정부

의 압력 하에서 발생

- 정책 입안자들은 강제적인 하향식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개선
- 지방행정 정부간 통폐합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상당한 재정적 저축
- 일부 정치인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냉소적인 견해도 존재
- 다각적인 행정단위 통폐합에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 단위의 구조개혁 과정

- 구조 개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진행됨
- 초기 단계는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새로운 정부시스템 및 정책결정 과정의 설계를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임명 (지방정부의 지배구조를 효율성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통폐합 전문 TF 가동)
-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 기간이 끝나고, 이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주의 행정 장관과 주의 총리에게 보고
- 행정장관은 지역 의회 통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 권고안을 주 정부 의회에 안건으로 회부
- 회부된 안건은 법령으로 통과
- 법령으로 통과되어 발효된후, 실제 지방 의회간의 합병은 지역민들의 개별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됨

○ 지방자치 단위의 구조개혁과 통폐합 통합 기대효과

- 통합된 의회시스템의 기능적 분산과 정책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장기적 청사진 수립
-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예산 집행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방 정부 운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의회의 지방 행정 서비스의 퀄리티 향상
- 장기재정적 건전성과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지역 개발의 업데이트 가능
- 새로운 행정단위에서의 공동체 기대치가 증가되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지역 관리가 가능

(11)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추진 현황

- 호주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반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드니의 경우, ‘지속가능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을 제시하고 10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음
- 연방·주·지방정부 각 차원 또는 연계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법」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연계 및 실효성이 떨어짐
- 제주의 경우, 제주의 특성반영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맞춘 정책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최상위 법정계획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지역별 특성화된 지표과약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2) 호주 투자 및 이민정책

- 호주의 중국 자본의 투자 규제 정책이 마련됨
- 호주 전반 분야 최대 투자국이 중국이나, 호주 국익 우선을 위한 투자 견제 정책을 실시
- 최근 호주 투자 승인 심사조건 강화
- 호주 연방정부는 2017년 5월 부동산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구조개혁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중
- 해당 정책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 부동산 판매 시 CGT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됨
- 재산원천징수법상 외국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하고, 조세한계치를 2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어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징수를 강화함
- 이러한 정부정책 및 제도에 따라 호주 은행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음

규제 방법		규제 내용
부동산 판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청구 불가
양도소득세		10% → 12.5% 인상
조세한계치		200만 달러 → 75만 달러 하향 조정
세금 추가 부과		- 5000달러/년 세금 부과 - 1년 중 6개월 이상 사용 또는 임대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대상
FIRB 투자 승인신청서 비용		- 10% 인상 - 부동산가에 따라 차등 적용 예)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소 5600달러
NSW 주정부조치	외국인 투자할증료 (FIS)	4% → 8% 인상
	외국인 토지세	0.75% → 2% 인상

자료원: 외국인 인수합병법 2015(2018.1. 부록 최신개정)

- 중국 정부 측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해외 투자가인 중국인들의 투자 승인 요청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52억 달러로 급감함
- 호주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의 호주 부동산 투자가 감소했고 더 나은 수익을 위해 동남아 국가 쪽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중국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호주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국가안보상 NSW 주 Ausgrid 전력망 중국 매각 차단
- 호주 재무장관은 2016년 8월 안보상 이유로 NSW 주 산하 배전망사업자인 Ausgrid를 99년간 임대하는 것과 관련, 중국 기업에 지분 50.4%를 넘기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말하며 중국 투자를 봉쇄함
- 중국 화웨이 5G 이동통신장비 입찰 배제
-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

- 호주 전반적 분야에 있어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나, 중국 투자를 특정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별도 없음
- 부동산, 농업 분야, 국가 인프라 분야 등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는 FIRB 심사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자국민 기회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함으로써, 호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위주로 선별해서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은 눈여겨볼만한 사항임

■ 뉴질랜드

□ 주요현황

- 뉴질랜드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두 개의 큰 섬(남섬과 북섬) 그리고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27만km² (한반도의 약 1.2배)임
- 웰링턴을 수도로 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474만명(세계 126위)
-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단원제(임기3년)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체제는 17개 region과 총85개 council, 지역별로 Regional Council 한 개와 3개~10여 개의 city council과 district council로 운영됨
 -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의 항구도시. 면적은 1,086km² 이며 인구 약 135만명 (2010년 기준) 의 뉴질랜드의 최대의 도시로, 북섬 북단에 자리 잡고 있음

	인구 순위	도시명	지역	인구(명)
	1	Auckland	Auckland	1,628,900
	2	Wellington	Wellington	418,500
	3	Christchurch	Canterbury	404,500
	4	Hamilton	Waikato	241,200
	5	Tauranga	BayofPlenty	141,600
	6	Napier-Hastings	Hawke'sBay	134,500
	7	Dunedin	Otago	122,000
	8	PalmerstonNorth	Manawatu-Wanganui	86,600
	9	Nelson	Nelson	67,500
10	Rotorua	BayofPlenty	59,500	

1. 방문지역 및 기관

• 오클랜드 시청 방문 및 시장 접견

① 선정이유

- 뉴질랜드 지방행정개혁(1987~1993) 내용 및 성과 점검
-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전국의 1/3규모)이며, 제주와 유사하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항구, 화산지형을 갖추어 도시의 중장기 발전 정책 현황 파악하고 성공적인 전략적 요소들을 이해
- 제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정책 등 기초 생활·환경 인프라 관리정책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오클랜드 시청 방문



오클랜드 시청 방문

• 오클랜드 및 멜리사 리 국회의원 접견

① 선정이유

- 멜리사 리 국회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8년 정계에 진출한 이후 내리 4선의 위업을 달성한 정치인
- 다민족 정책과 법령을 주요 의제로 활동 중인 멜리사 리 의원은 중고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고자 하는 커리큘럼과 다인종 차별 폐지 정책을 옹호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원화된 뉴질랜드 사회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치 문화 형성에 기여



멜리사 리 국회의원과

2. 자료수집 방법

- (1) 기존 문헌 등으로 파악한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사전에 방문예정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방문 미팅을 준비함
- (2) 요청한 자료를 출국 전 회신 또는 현지 방문 시 제공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3. 자료수집내역

- (1)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공공시설물 운영 중심으로)
 - 신공공관리론, 신제도주의 등의 행정철학에 입각하여 약 10년간 행정개혁을 추진한 바 있음. 현재 기준에서 성과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내용 점검 필요
 - 정부차원의 행정개혁이 지방자치단체(region)에게 제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오클랜드 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정책 및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 시설공단 조례안에 대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및 조직운용 현황 및 성과
 -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순환보직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 뉴질랜드 행정개혁 내용 중 인사 및 조직분야도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주요 내용과 그동안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기존의 전문관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제주특별법」 제48조의 직위분류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오클랜드시의 Unitary Plan 법적근거 및 정책실효성

- 오클랜드시가 마주한 현안은 제주와 비슷한 상황임. 즉,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뉴질랜드 인구의 1/3 규모의 도시답게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가 급성장하는 지역임
- 오클랜드 시는 이에 따라 환경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조화롭게 성장·관리하기 위해 Unitary Plan을 2013년 9월에 마련함
- 이는 1991년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목표를 달성하면서, 주민과 기업 활동에 매력적이고 환경과 사회적 기준이 존중되고 지지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30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임
- 기존 계획을 통합한 Unitary Plan에 대한 법적 근거, 정책성과, 의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파악하여 제주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계획허가제, 곧 착수예정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시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함

(4) Auckland Plan 2050 추진 현황 및 성과

- 오클랜드 시는 GDP의 약40%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30년간 인구규모 약 72만명이 증가한 24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오클랜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6월 Auckland Plan 2050 를 수립 하였으며, 3가지 당면과제 해결하기 위해 20개 분야 37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 세 가지 주요 당면과제는 ① 인구증가에 따른 공동체, 환경, 주택 등 생활 인프라 대응 ② 모든 오클랜드인에게 성장의 과실을 공유, ③ 환경 파괴의 감소임
- 30년 후 오클랜드가 지향하는 성과는 6개 정책분야로 상정함

<법적 정책틀(Statutory policy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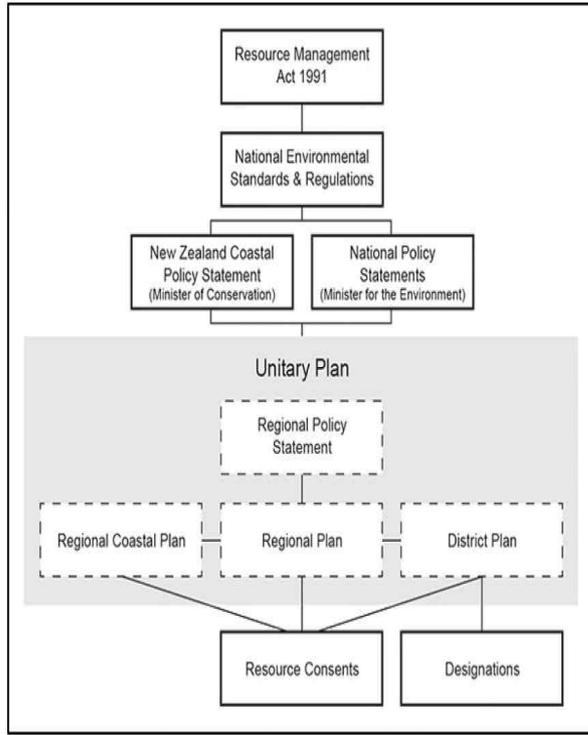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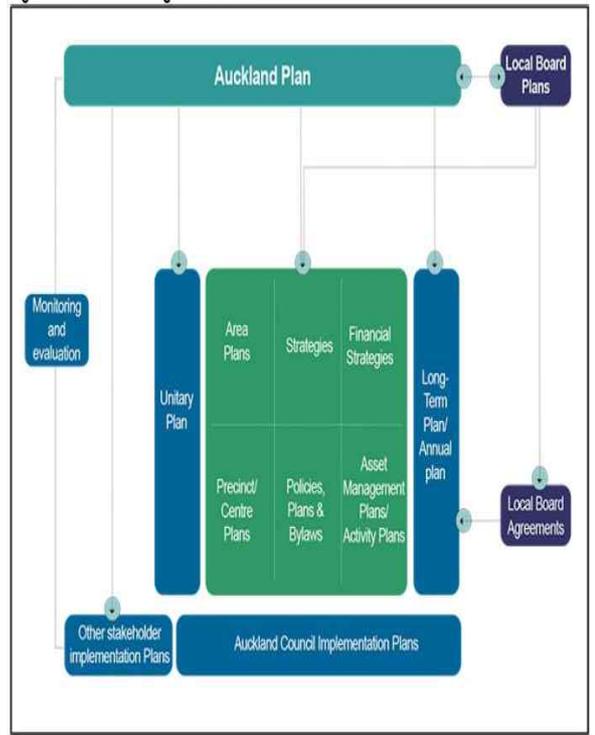


Figure 3: Council's strategic framework



(자료: auckland council(2019), The Proposed Auckland Unitary Plan.)

<Auckland Plan 2050이 제시한 6개 정책성과 분야>



- 오uckland가 당면한 현안은 제주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프로세스 현황과 관리체계, 성과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계획 또는 관리지표에 반영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함

(5) 원주민(마오리족)과 이주민 상생 정책현황 및 성과

- 오클랜드는 유럽인 57%, 마오리족 11%, 아시안 18%, 태평양 14%로 구성됨
-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을 비롯한 소수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2019 세계 삶의 질 생활환경조사 세계 3위로 자리매김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에 관련 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제주 이주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함

(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탄력성(Social Resilience)’ 정책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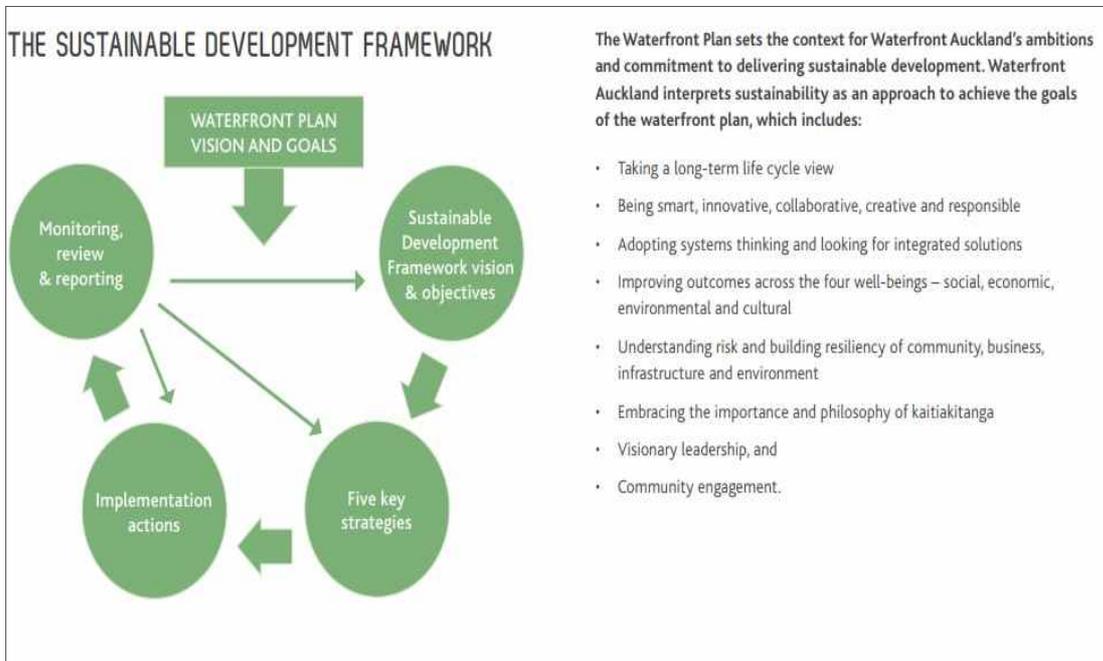
- 오클랜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탄력성 개념을 상정함
- 이는 인간, 자연자원, 환경, 경제자원의 공정한 배분, 거버넌스 등임
- 사회적 탄력성 개념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와 연동하는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사회적 탄력성 개념이 정책수립 시 기본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조례 제·개정)을 검토함
- 특히 ‘거버넌스 구조와 프로세스’ 정책 파악을 통해 그동안 취약분야로 제시되었던 제주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뉴질랜드 사회적 탄력성 개념>



(7) 환경탄력성 정책 현황 및 성과

- 제주다움을 상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이 중요함
- 오클랜드도 제주와 유사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탄력성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오클랜드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매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8) 개발사업 승인조건인 환경영향평가 정책 현황 및 성과

- 제주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기여도, 지역주민 상생도 등이 항상 이슈가 되어왔음
- 제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의회동의 사항이나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오클랜드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파급영향, 사회적 기여도, 교통영향 등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와 역사를 파악하여 의회의 공유재산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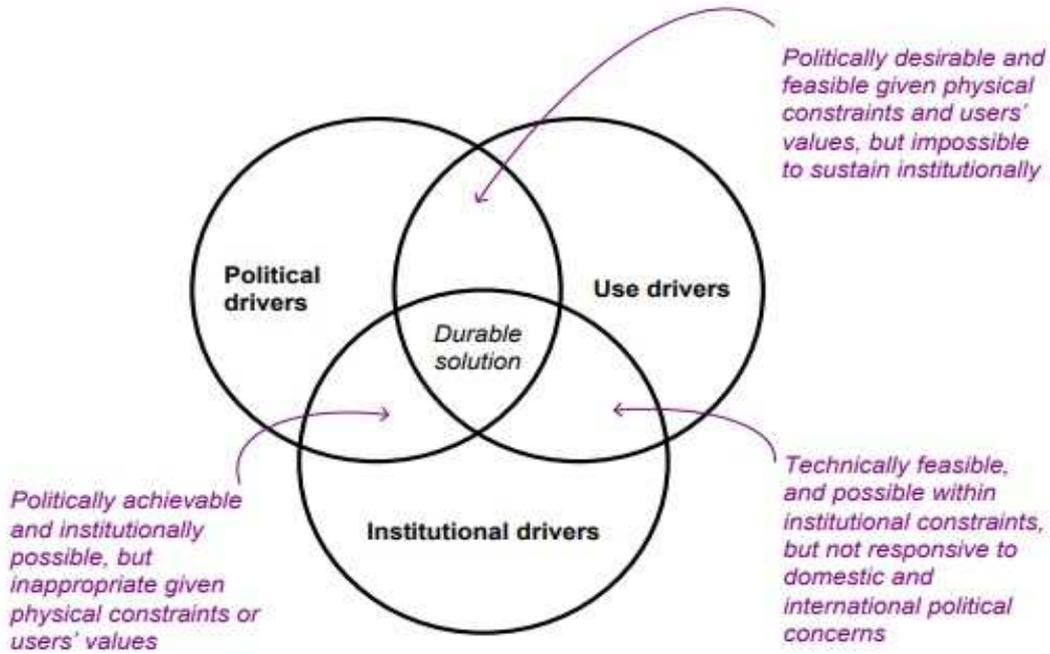
<오클랜드 환경영향평가 항목>

Issue	Element
Natural hazards	Minimising risk
	Ensuring resilience
Climate change – mitiga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Passive desig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limate change – adaptation	Future-proofed design for climate change
Resource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Building design, performance and lifetime use
	Water efficiency
	Waste management
	Building materials
Environmental quality	Stormwater treatment
	Water quality
	Air quality
	Contaminated land
	Biodiversity and ecology
Transport, movement and connectivity	Public transport
	Walking and cycling
	Parking provision
	Shared transport
Economic vitality	Mixed economy
	Economic growth
Cultural and heritage values	Sense of place – turangawaewae
	Heritage
	Custodianship – kaitiakitanga
Social well-be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amenities
	Housing choice
	Sustainable and healthy lifestyles

(9)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하수처리장 시스템

- 뉴질랜드 사회는 날로 물 경쟁이 증가하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관개 시설과 하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효율성·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위주로 고려되고 있음
- 수량과 수질 문제의 주요 원천인 농업(주로 낙농)의 성장은 교외지역의 개발로 이어지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사회가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더 나은 정보와 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적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
- 합리적인 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 정책은 뉴질랜드 내 수계의 특성과 그것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전문가들의 진단을 수용함
- 지역 중심의 물 정책 불확실성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물의 사용과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호도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 수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부족하여,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심각한 수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IT 수단을 활용
-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물 관리 시스템이 직면할 과제를 탐구해야 하는 상황
- 특히, 수자원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정책 입안자, 과학자, 경제학자들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중요 역할을 함
- 물 가용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인 탐구 실시

Multiple drivers framework



Source: NZ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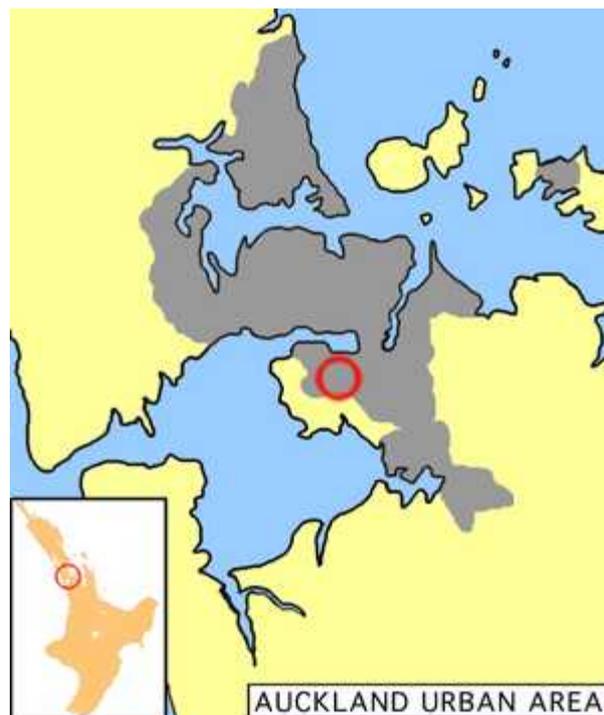
수자원 정책 프레임워크

출처: Water management in NZ, 2014

- 생태계 서비스 (ES)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물 사용의 물리적, 환경적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해 물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해하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함
- 총 경제 가치는 물 사용자가 고려하는 시장 가치와 비 시장 가치 모두에서 물에서 가치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여 물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량을 예측하고 미래 자원의 개선 가능성을 제공
- 이런 물관리 방안이 유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 가격 책정이 대중의 지지가 결정적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및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며, 오클랜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 (예산입안부터 정책 결정까지 시의회의 평가가 요구됨)
- 수자원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과 물 관리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 관리 시스템은 정책관련 연구와 성과측정에 의존 (대학교와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자원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의회가 결정하며, 정량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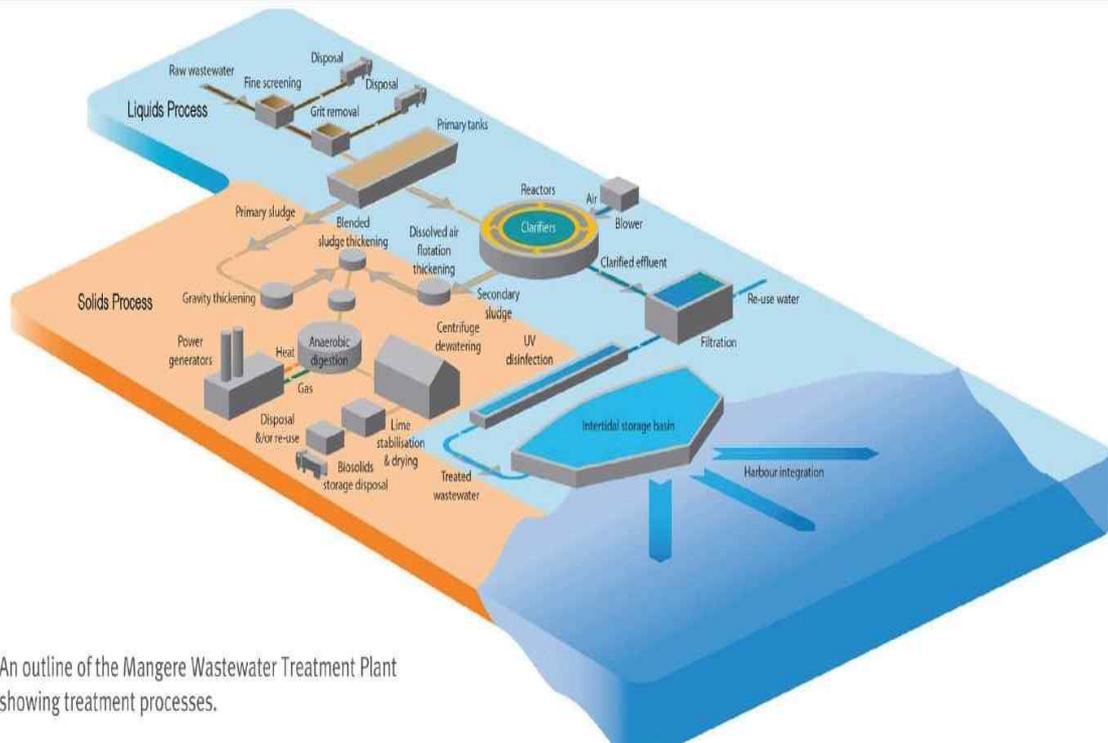
- 물을 할당하는 규제를 개발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자원분배의 효율성 및 정책적 내구성 향상
- 정책 연구에 최대한 투자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상호적인 정책 결정 틀 수립 (의회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
- 국가적인 규제와 법제의 통제 속에서 오클랜드 지방 하천 시스템과 수자원 수요·공급량을 중심으로 통합적 물관리 의사결정시스템 유지
- 수자원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시의회 (담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 오클랜드 시의회의 담수 상태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이 지역의 담수 자원의 품질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수질 수량 상황을 공유하는 것임
- 담수 모니터링은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측정의 조합을 사용



맹거리 지역 위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Mang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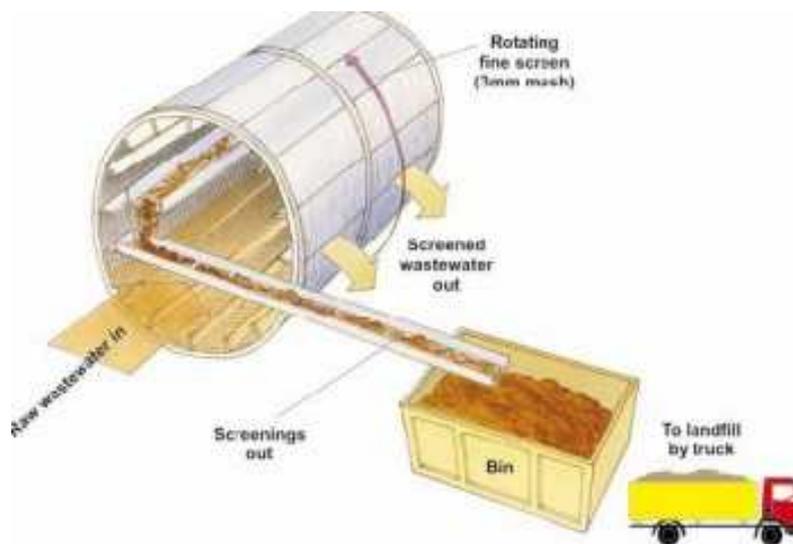
- 멥거리 (Mangere)의 폐수 처리장은 오클랜드의 폐수 처리의 대부분을 21세기까지 잘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위치는 오클랜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에 개설되었으나, 2003년에 최신시설로 업그레이드 됨
- 이 시설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폐수의 처리주기를 21일에서 13시간으로 줄였으며, 처리 과정은 악취를 줄이고 마누카우 항구로 들어가는 수질을 크게 개선했음
- 멥거리와 로즈데일의 공장을 포함한 Watercare의 폐수 처리 공장 중 가장 현대적인 시설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를 1차적(기계적공정)으로 처리하고, 2차적으로는 생물학적 공정을 이용하며, 마지막으로 3차의 여과 및 자외선 처리 방법을 적용함
- 폐수와 우수 수집 시스템이 여전히 혼합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의 오래된 지역의 폭풍우와 그 지역 전역의 침투 및 불법적인 파이프 연결로 인해 흐름이 증가
- 처리된 폐수의 평균 처리량은 30만 세제곱 미터 (와이로아 강보다 더 큰 용량을 처리)
- 폐수 처리는 첫 단계로 고체와 액체 분리와 액상 폐기물로부터 유기 고형물 추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영양소 제거 및 BOD 저하



An outline of the Mangere Wastewater Treatment Plant showing treatment processes.

맹거리 하수처리장의 공정 과정

(출처: Watercare.co.nz)



맹거리 하수처리장의 1차 처리 공정 과정

(출처: Watercare.co.nz)

※ 1차 처리

- 1차 하수 처리는 기계적이며 본질적으로 고체를 액체 폐기물 스트림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포함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여 2차 BNR 과정 공정

(출처: Watercare.co.nz)

※ 2차 처리

- 반응기/분쇄기 및 생물학적 영양소 제거(BNR)하는 과정
- 2차 처리는 9개의 큰 처리장에서 수행되고, 각 반응기/분쇄기는 용량이 크고 3천130만 리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폐수 처리와 동일
- 2차 처리 시스템은 BNR (Biological Nutrient Removal)을 이용하여 활성 슬러지를 제거하고 (세균이 높은 슬러지), 박테리아는 생물학적으로 유기 오염물질(이 경우 질소와 암모니아)을 제거하고 생화학적 산소 수요를 줄이도록 하는 공정



자외선(UV) 소독과 여과처리하는 3차 공정

(출처: Watercare.co.nz)

※ 3차 처리

- 자외선(UV) 소독과 여과처리 하는 공정이며, 남반구에서 가장 큰 하수처리 시설
- 유출수 흐름의 병원균을 줄이기 위한 소독과정과 정제과정 (7,776개의 자외선 UV 램프)
- 탈수 과정을 거친 후, 악취 조절악취제어 장치에 의해서 처리
- 이용되는 악취 조절용 바이오필터는 스코리아와 나무껍질로 이루어짐
- 컴퓨터화된 배포 제어 시스템으로 통제하면서, 최종배출물을 항구로 배출



맹거리 하수처리장 사진

출처: www.watercare.co.nz

■ 뉴질랜드 호주의 탐방을 통한 제주에서의 시사점

- 자연환경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 뉴질랜드)의 중장기 지역 환경 정책체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서비스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정책 추진 중이었음
 - 의회중심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유대적인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각각의 관할 영역을 분리하여 선택과 집중의 행정시스템 운영중
 -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통로가 다양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높은 정치 문화 의식을 보유

-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와 의회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었음
 - 주민과 소통하는 호주·뉴질랜드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업무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제주 도정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필요
 - 분권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법안 발의와 심사평가간에서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층적인 법안의 필요성·효과 등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의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제주에서도 유사한 의회의 문화가 확립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구정책과 사회적 탄력성 정책, 인사·조직운영 제도는 제주가 앞으로 미래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자원 정책이나, 지역정부간 통폐합의 경우를 사례연구하면서, 미래 제주를 위한 최적화된 지방분권 시스템을 토대로, 통합적인 수자원 정책결정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는 결론

- 뉴질랜드·호주의 경우처럼 전문성이 강화된 공직사회, 주민이 체감하는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미래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함

참고문헌

-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연구 “호주지방정부의 위기와 대응” (www.gaok.or.kr) (2019.08.29. 최종검색)
- 2)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헌정제도연구, 2018.
- 3) 호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 분석센터, 정책연구, 2012.
- 4) 채홍호, 호주 독립위원회를 통한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강화, 시드니 총영사관 시도지사협의회 대양주지방협력센터
- 5) Kotra 해외시장뉴스 “호주의 중국 투자 규제 동향”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 (2019.08.29. 최종검색)
- 6)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회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7) Dollery, B (2009).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Australia
- 8) Holland, K. (2018). State of the Environment Monitoring: River Water Quality Annual Report 2016, Auckland Council
- 9) <https://www.parliament.nsw.gov.au/about/Pages/The-Roles-and-Responsibilities-of-Federal-State-a.aspx> (2019.08.29.최종검색)
- 10) Schultz, S. (2018). Mangere Wastewater Treatment Plant